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4년 경제정책방향(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해외 농정 이슈

미국 농가소득 전년대비 15.1% 증가 전망 등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지역소득(잠정)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2014년 경제정책방향(농림축산식품부)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정부, 12.27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2014년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2014년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총력 경주
 - (민간부문 활력제고) '13년 경기회복 모멘텀 → '14년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 → “내수활력 제고”

- 경기회복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 되도록 “투자촉진 및 소비여건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3~4년을 바라보며 리스크 대응 강화

- (체감경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경제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 “청년·여성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 로드맵 본격 추진
-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비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강화”
-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갈 필요

- (미래대비)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 미래 대비 과제 본격 추진 → **“경제체질 개선”**

- 내년은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
-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행
-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대비 구조개혁” 적극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i) 해외 신규시장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ii)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iii)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체감형 복지지원 확대, iv) 농식품분야 신규시장 창출 등 제시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방향

1)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인 대상 맞춤형 홍보*** 등 추진
 - 대형유통매장 내 안테나숍 설치, K-Food 박람회, 대규모 판촉홍보행사 등

- 전문조사기간과 연계하여 시장 상황, 검역·검사체계 등 **국가별 수출정보 조사 확대**, 수출농가업체에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2)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ICT 활용한 창의적 농식품 직거래 모델 개발 및 확산**
 - 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 및 소상공인 직거래를 위한 POS Mall 구축
-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및 관기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 정가수익매매 확대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 **수급안정을 선도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사전 전달체계 강화**
 - 전국 농협하나로클럽 농산물 가격예보(농협), 수급정보 주례 홍보(aT) 등

3)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체감형 복지지원 확대

-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 소득기준금액 상향** (79만 원 → 85) 조정(1월),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4월)
 -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
- **농촌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 등) **확충**
- 농촌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교통 서비스 제공모델 발굴·확산**

4) 농식품분야 신규시장 창출

- 핵가족화 등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1인식품, 실버식품, 어린이식품** 등 **미래 식품트렌드**를 주도할 **신제품 개발**

주요 농정 이슈_2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지연금, 내년부터 고령 농업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에 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농식품부, 12.26일,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2.18)

<농지연금>

- (정의)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 가능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 (개선사항)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 (현재) 공시지가 → (개선)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 주요내용

-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2014.3.31.일까지)**
 - (**기존 공시지가 유지하는 경우**) 현행 유지(대출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기간형-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행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종신행-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 반영하여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생활장치로 가능

※ 가입비(예): 담보농지가격이 100백만 원인 경우 가입비는 2백만 원

구분	현재	개선	기대효과
대출이자	4%	3%	채무 경감 효과
가입비	담보농지가격의 2%	폐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초기 가입 부담 해소

- (**개선효과**)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0천 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4천 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 (**기대효과 및 계획**)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 추진
 - ※ 농지연금 가입조건 (현재)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2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2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0월 소비자동향 조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중 107, 전월과 동일**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2	104	105	105	105	102	106	107	107
(전기 대비 지수차) ²⁾	△2.1	2.1	0.7	△0.2	0.2	△2.9	4.2	1.3	△0.6
구 성									
지수의 기여도									
(p)									
현재생활형편	0.0	0.3	0.0	0.5	△0.5	△0.5	0.5	0.2	0.0
생활형편전망	△0.2	0.2	0.4	△0.2	△0.2	△0.6	0.8	0.2	△0.1
가계수입전망	△0.3	0.0	0.0	0.0	0.0	△0.7	1.3	0.0	0.3
소비지출전망	△1.2	0.3	0.0	△0.3	1.2	△1.2	1.2	0.3	△0.3
현재경기판단	0.1	0.4	0.3	0.0	△0.1	△0.3	0.6	0.3	△0.3
향후경기전망	△0.5	0.9	0.0	△0.2	△0.2	0.4	△0.2	0.3	△0.2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 전월과 동일,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가계수입전망CSI] 전월대비 1p 상승,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1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A)	12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¹⁾	90	91	91	93	91	89	91	92	92	(-)
생활형편전망CSI ²⁾	97	98	100	99	98	95	99	100	99	(△1)
가계수입전망CSI ²⁾	99	99	99	99	99	97	101	101	102	(+1)
소비지출전망CSI ²⁾	105	106	106	105	109	105	109	110	109	(△1)

주: 1)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 84, 전월대비 3p 하락**
- **[향후경기전망CSI] 96, 전월대비 2p 하락**
- **[취업기회전망CSI] 94, 전월대비 1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 135, 전월대비 1p 하락**
- **[금리수준전망CSI] 100, 전월과 동일**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 분	'1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A)	12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¹⁾	74	79	82	82	81	77	84	87	84	(△3)
향후경기전망CSI ²⁾	88	97	97	95	93	97	95	98	96	(△2)
취업기회전망CSI ²⁾	90	94	96	92	91	95	93	93	94	(+1)
물가수준전망CSI	136	135	132	133	138	144	138	136	135	(△1)
금리수준전망CSI ²⁾	85	84	90	100	98	97	100	10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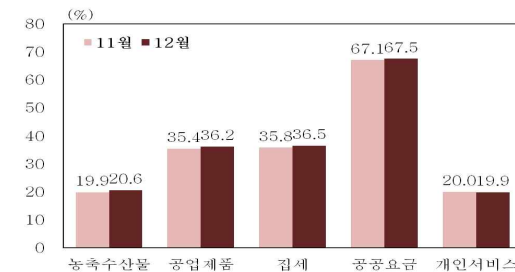
주: 1)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 2.9%, 전월 동일**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된 품목**에 대하여 공공요금(67.5%), 집세(36.5%), 공업제품(36.2%)순으로 응답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비중>



1. 미국, 2013년 농가소득 전년대비 15.1% 증가 전망

□ USDA ERS, 미국 농가소득 1973년 이래 최대 전망

-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2013년 미국 농가소득이 40년 만에 최고치 달성 전망
 - 이는 **축산소득의 수익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2013년 순농가소득(net farm income)**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1,3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
 -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 순농가소득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02년부터 꾸준한 상승세

□ 2013년 미국 농업생산규모 견고한 성장 전망

- **[농업생산액 가뭄 회복]** 2012년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회복하여 2013년 미국의 작물, 축산, 낙농, 가금류 생산액은 모두 견고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
 - 특히 옥수수, 건초, 대두, 가금류, 계란, 우유 생산액의 증가는 전반적인 농업생산액 증가 예상
- **[농업생산비 지속적 상승]** 농업생산비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3% 증가한 3,520억 달러 전망
 - 하지만 농업투입요소 가격 상승세 둔화로 2013년 농업생산비 증가율은 전년 증가율의 절반 수준
- **[직불금 규모 상승]** 2013년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불한 직불금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140억 달러

자료: USDA ERS(2013.11.26), Reuters(2013.11.26).

2. EU집행위원회의, EU 유기농업 연왕 발표

□ EU 유기농업의 주요 변화 추세

- EU집행위원회, 유럽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면적, 종사자 수 등 지표분석을 통해 2002~2011년 사이 EU 유기농업의 변화 양상 고찰
 - **(유기농지 면적)** 동기간 570만 ha에서 960만 ha로 68% 증가한 반면, 전체 농지 대비 유기농지 비중은 5.4%에 불과
 - **(유기농지 활용)** 영년초지(45%)가 전체 유기농지의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곡물(15%), 영년생작물(13%) 순. 축산은 양(46%), 소(30%), 돼지(10%), 염소(6%) 순
 - **(유기농업인)** EU 유기농업경영체 수는 18만6천 개로 EU 전체 농업경영체의 1.6% 차지
- EU 전체 유기농업에서 EU 15개국¹⁾이 유기농지면적의 78%, 유기농업경영체 수의 83%로 대부분의 비중 차지. EU N12개국²⁾은 2002~2011년 사이 연평균 13%의 성장세로 유기농지 면적 증가(60만 ha → 210)
- **[회원국별 유기농지]** 스페인의 유기농지 면적이 180만 ha로 가장 넓고, 이탈리아 110만 ha, 독일 100만 ha로 3개국이 EU 27개국 유기농지의 약 40% 차지
 - **(유기농지 비중)** 전체 농지 중 유기농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19%), 스웨덴(15.7%), 에스토니아(14.1%), 체코(13.1%), 라트비아(10.1%) 순
 - **(경영 규모)** 2010년 EU 27개국 유기농업경영체 당 평균 경영규모는 34ha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11).

1) EU 15개국: 2004년 이전 EU 회원국에 포함된 국가로 벨기에(BE), 덴마크(DK), 독일(DE), 아일랜드(IE), 그리스(EL), 스페인(ES), 프랑스(FR), 이탈리아(IT), 룩셈부르크(LU), 네덜란드(NL), 오스트리아(AT), 포르투갈(PT), 핀란드(FI), 스웨덴(SE), 영국(UK) 등.

2) EU N12개국: 2004년에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체코(CZ), 에스토니아(EE), 키프로스(CY), 라트비아(LV), 리투아니아(LT), 헝가리(HU), 몰타(MT), 폴란드(PL),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등 10개국과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BG), 루마니아(RO) 2개국을 포함.

3. 미국, 락토파민 검증 프로그램 실시

□ USDA, 육류 내 성장호르몬 촉진제 락토파민 검증 프로그램 실시

- 미국농무부(USDA), 11.5일 자국산 축산물에 성장촉진용 동물성 약품에 무해함을 증명하는 네버페드베타아고니스트(Never Fed Beta Agonist) 프로그램 시행 발표
 - 이는 수개월에 걸친 러시아의 미국산 육류 수입 금지 해제를 위한 미국의 첫 움직임
 - 올해 2월 러시아는 베타아고니스트 계열의 물질을 포함한 축산물 수입을 금지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미국에게 정부의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의 규정*을 들어 이를 거절한 바 있음.
 - ※ 베타아고니스트 계열의 물질이 특정 잔류허용량 이하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규정, 베타아고니스트 물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락토파민(ractopamine)으로 미국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에 성장촉진제로 광범위하게 사용. 락토파민은 육류에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 중국, EU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 금지

□ 러시아, 미국 육류 수입 여전이 금지

- 러시아의 수의식물위생감시국(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VPSS), 11.22일, 사료첨가제 락토파민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전히 미국산 육류 수입금지 상태 유지
 - 미국은 2012년 러시아에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돼지고기·쇠고기를 수출하였으나 현재는 제로상태. 러시아는 2014.2~3월 락토파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미국의 칠면조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

자료: Weekly Agra News(2013.11.10), Inside U.S. Trade(2013.11.15), Reuters(2013.11.23).

4. 크로아티아의 농업 구조 및 연왕 파악

□ EU집행위원회, 크로아티아 농업 연왕 분석

- 크로아티아는 2013.7.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한 28번째 신회원국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기준 크로아티아 농업 현황 분석
- [농업 현황] 2010년 농업경영체 수는 223,280개, 농지면적은 130만 ha로 EU 28개국 전체에서 각각 1.9%, 0.8% 차지
 - 가축단위(LSU)*는 1,020,180으로 EU 28개국 전체 가축의 0.8% 차지
 - ※ 가축단위(Livestock Unit, LSU)는 종(種)과 수명 길이 등이 다양한 가축을 비교하기 위해 축종별 가축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준화 한 것임.
- 크로아티아 농업은 소농 중심으로 평균 농지면적은 5.6ha에 불과하여 경영 농지면적이 2ha 미만인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52.5% 차지
 - 한편 EU 27개국 평균 농지면적은 14.4ha
- [주요 작물] 농지의 68%를 경작지(arable land)로 사용. 그 중 곡물생산이 65%로 대부분이 사료용 옥수수 생산(310,450ha)에 이용
 - 한편 영년초지 및 영구채초지 비율은 25.8%로 EU 27개국 평균 34%에 비해 낮은 수준
- [혼합 경영 비중↑] 작물축산혼합농이 22.6%로 EU 27개국 평균 12.6%보다 높은 수준. 그 외 노지작물농 18.2%, 방목형축산농 16.1%, 영년생작물농 14.6%, 혼작농 10.3% 등
- [축산 현황] 가축단위(LSU)로 환산 시 돼지 37.4%, 소 36.6%, 가금류 14.8%, 양 8.7% 순. 경영체 당 평균 사육단위는 5.3LSU로 EU27개국 평균 20.0LSU에 비해 낮은 수준
- [가족 경영] 크로아티아 농업은 대부분 가족경영으로 농업노동력의 90.7%가 농장주와 그 가족 구성원. 이는 EU27개국 평균 76.4%에 비해 높은 수준

자료: Eurostat(2013.11.7.)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2월 23일~27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국정과제 예산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듯

-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12.25일, 비공개 협의 통해 **국회 본회의(12.30일)**에서 **내년도 예산 정부 원안대로 국회 통과 예상**. 이에 따라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 원, 디지털 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 원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 ▲창조경제종합 지원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 원 상임위 삭감분(20억 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 모두 의결, ▲정보공유활성화하는 정부 3.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 원과 정부3.0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 원 등 정부원안 고수,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 원 모두 반영, ▲보류 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 논의 완료.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 운동-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 재논의 예정, ▲**쌀 목표가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차원에서 가동 중인 여야정 6인협의체에서 논의 계속**하기로

자료 : 데일리안머니투데이서울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한겨레한국경제YTN(2013.12.27.)

□ 농식품부 장관 FTA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약속

- 12.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7차 이사회’에 앞서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장관, **FTA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특히 **쌀과 축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강조. ▲**주요 발언 내용**…△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쌀 산업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만들고 있다**”, △ “단순히 쌀값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를 촉진해 농민들이 제값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 △ “**고정직불금 신청절차 간소화** 하겠다”, 예전에 **부정수급자 문제로 신청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진 상황**인데 현재 모든 농가는 **경영체 등록, 이 시스템 활용해 고정직불금 절차 간소화**, △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사료값을 우리만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에 직불금을 많이 줘서라도 조사료 생산**하게 하고, 산에도 조사료를 심도록 하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자급조사료 확대**하겠다”,

△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고, 나아가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업 발전방안 수립**하겠다”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2.23.)

□ 농식품부, 돼지유행성열사병 특별 방역대책 실시

- 농식품부, 12.20일,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돼지 유행성열사병(PED)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PED 발생에 따른 자돈 폐사로 인해 내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초동방역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추진. 실제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PED 발생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 이후 9건에 걸쳐 1,721마리에서 발생. ▲**주요내용**…추가적으로 축산농가에 3차례에 걸친 PED 예방접종과 도축장, 축산관련 차량의 철저한 소독 상태 점검, 지자체, 방역본부 등에서 소독반 편성해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축산차량등록제(GPS) 이용해 발생농장 출입한 차량 추적해 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양돈협회 등 유관 협회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 ※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PED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조치와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경기, 충남, 경북,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
 - ※ 129일 PED 발생주의보 발령,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조치와 함께 발생·의심지역 임신 돼지 30만 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실시

자료 : 농축유통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2.12.26.)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3.12.27.)

□ 도축 검사수수료 인상 ‘반발’

- 지난 7.30일, 정부가 공포한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2014.1.31일부터 본격 시행**으로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등은 축산물 위생관리와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육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시점 감안할 경우 이르면 **2014.7월쯤부터 검사관 배치** 이뤄질 예정. 이에 따라 시도 등 지자체 소속인 검사관이 이들 업종에 의무 배치될 경우 **도축 검사수수료가 내년 초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가를 비롯한 관련업계 반발 예상***.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식약처, 현재 생산자단체의 의견 수렴 중. (**한국 오리협회**) 20원의 검사수수료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부담, 지자체마다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우, 돼지 등 타축종으로 확대 적용, 추가적

인상 우려. **(전국한우협회)** 현재 한우는 도축장에 위생검사원 두고 있어 별도 인상 논의가 없는 상황, 하지만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와 수입육 공세로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농가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 반드시 배제돼야

※ 그동안 마리당 4원의 검사수수료를 낸 닭과 자체검사로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은 오리의 경우 농가를 비롯한 관련업계 저항 예상. 논의 중인 검사수수료 수준은 대략 닭은 마리당 10원, 오리는 20원 정도

자료 : 농수축산신문(213.12.23.)

□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

- 국회, 12.19일, 본회의,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14년 말 → 2019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해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 5년 연장. 정부, 농어민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소득의 9%)의 절반 보조하고 있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입입인 추가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자료 : 농민신문(2013.12.23.)

□ 2013년 주요 농경 관련 10대 이슈

[박근혜 정부 출범...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구축,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추진**
 - ‘생산자는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덜 내는’ 유통구조 구축 핵심. 전국 5대 권역별 농협도매물류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았고, 로컬푸드·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기

[돼지고기 가격 변동 심화]

- 사육마릿수 증가로 시장 공급 물량 증가, **연초부터 한우돼지고기 값 약세 현상의 장기화 우려**
 -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연중 소비촉진 운동을 펼친 데다 일본 방사능 사고 여파로 소비 증가하면서 예상 밖의 선전
- 돼지고기 도매값(탕박 1kg 기준) 1월 3,003원 → 4~5월 3,500원 → 6월 4,300원대, 이후에도 3,200원~4,100원대 오르내리는 등 등락폭 커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 9월 타결, 각 품목의 개방 일정 논의하는 2단계 협상 11월부터 시작
- 정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사 공식 표명, 12월 한·호주 FTA 협상 타결, 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재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개장]

- 농협, 총 사업비 1352억 원 들여 건립한 농협안성물류센터는 부지면적 9만3227㎡, 연면적 5만8140㎡ 규모, 전국의 모든 농산물을 수집·분배·저장·상품화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농산물 복합유통시설**(8월 개장)
-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20곳 신설·운영, 기업체와 손잡고 농산물 상생 광고 실시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하는 데 총력

[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논란]

- 정부, 한우값 하락 요인 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부분만 직불제 적용하는 ‘**수입기여도**’ 도입해 **농가들 반발**
 - ※ FTA 직불제는 해당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 가격이 지난 5년 평균가격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직불금 총액은 319억 원으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2,017억 원과 비교 시 1,698억 원 차이 발생. 전국한우협회가 수입기여도 적용 취소 소송 준비 중, 논란은 내년에도 지속

[한우농가 폐업 속출]

- 통계청, **한우(육우 포함) 사육 농가수** 계속 감소. 이는 **사료값 인상, 축산 강대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 등으로 **한우산업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
 - ※ ('12년 말) 14만7,000농가 → ('13.6월) 13만7,000 → ('13.9월) 13만2,000
- **기업형 농가들**은 오히려 **사육마릿수 늘리는 기현상** 발생
 - ※ 통계청, 한우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수 ('12.12월) 5,400 → ('13.9월) 5,800농가로 증가.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도 ('12년 말) 20.8 → ('13.9월) 23.1마리로 증가

[태풍 피해 없는 해...풍년의 역설]

- 4년 만에 태풍 피해가 없었던 올해는 **농산물 풍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두드러져 채소류는 물론 과일까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
- 반면 **지역별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한 피해** 발생
 - (4월) 경남·북과 전남지역 등지에서 눈과 이상저온으로 배와 자두꽃 등에 연피해 발생. (7월)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 집중호우 발생,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 발생, (8월경) 제주를 비롯한 남부 일부지역에 지속된 가뭄으로 농사에 차질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본격 도입]

- 정부, **올해부터 정가·수의매매 적극 육성, 2016년에는 농산물 거래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
 - ※ 정가·수의매매는 생산자가 농산물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정가), 생산자와 구매자가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수의)하는 거래방식
- 농산물 가격결정 방식 다양화를 통해 농산물 거래 규모화 및 가격 변동성 완화 기대

[쌀 목표가격 결정 지연]

- 정부, 5월에 2013~2017년산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80kg 기준)으로 인상안 국회 제출. 하지만 농민단체는 23만 원 주장, 여야 의원들 역시 인상 필요성 공감. 다만 야당 의원들은 19만5,601원 인상,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인상 주장
- 이 같은 논란은 농식품부 종합국감 등으로 연결, 1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7만9,686원 제시. 하지만 국회가 정부안 거부

[정부,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선]

-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 5월 발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은 새정부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품목 현재 56개 → 2017년까지 66개 품목 확대, 사과·배 등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만 보장하는 방식 → 단계적으로 모든 재해 보장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변경, 보험의 가입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 점차 현실화해 농가의 재배기술 수준에 따른 수확량·품질 차이 반영
- 자료 : 농민신문(2013.12.27.)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지역소득(잠정)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2년 지역소득 추계결과

1)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규모(당해년 가격)

- [2012년 시도 전체의 명목 지역내총생산] 1,275조 원, 전년대비 약 33조 원(2.7%) 증가
 - (사도별) 서울 289조 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 251조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제주 12조 원으로 가장 하위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전국의 47.1%로 전년 47.2%보다 0.1%p 축소
- 산업의 사·도별 비중
 - (농림어업 비중) **경북(16.5%), 전남(13.8%), 충남(13.2%) 등 상위**
 - ※ 경북(14.6% → 16.5), 충남(12.5% → 13.2), 충북(5.7% → 5.9) 등 비중 확대
 - (광업·제조업 비중) 경기(23.0%), 충남(12.7%), 울산(11.5%) 등 상위
 - ※ 경기(22.5% → 23.0), 충남(12.4% → 12.7), 전남(6.7% → 6.9) 등 비중 확대
 -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 비중) 서울(32.7%), 경기(18.8%), 부산(6.1%) 등이 높았으며, 울산(1.8% → 1.9%)에서 소폭 확대
 - (건설업 비중) 경기(22.3%), 서울(13.3%), 충남(8.7%) 등 상위
 - ※ 부산(5.1% → 5.8), 충남(8.2% → 8.7), 울산(2.7% → 3.2) 등 비중 확대
- [2012년 시도 전체의 명목 최종소비지출] 886조 원, 전년대비 38조 원(4.5%) 증가, 총고정자본형성 337조 원, 전년대비 3조 원(-0.9%) 감소
 - (사·도별) 서울 211조 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기 204조 원, 제주 10조 원으로 가장 하위
 - ※ 상위지역: 서울(211조 원), 경기(204), 부산(57)
 - ※ 하위지역: 제주(10조 원), 울산(19), 광주(24)
 - (서울경기 지역 민간소비지출) 각각 175조 원·165조 원, 전국의 49.7% 차지

○ [2012년 사·도 전체의 총고정자본형성(명목)] 337조 원, 전년대비 3조 원 (0.9%) 감소

2) 지역총소득 및 개인소득(명목)

○ [2012년 사·도 전체의 지역총소득(명목)] 1,282조 원, 전년대비 약 37조 원 (3.0%) 증가

- (사·도별) 서울 386조 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297조 원, 제주 11조 원으로 가장 저조

○ [2012년 사·도 전체의 개인소득(명목)] 739조 원, 전년대비 약 22조 원 (3.1%) 증가

- (사·도별) 취업자 수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의 개인소득 규모가 컸으며,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 지역은 가장 하위
 ※ 상위지역: 서울(175조 원/504만 명), 경기(171/592), 부산(52/163)
 ※ 하위지역: 제주(8조 원/30만 명), 강원(19/69), 울산(20/55)

3) 지역소득 주요 지표의 실질 증감률*

※ 2012년 16개 시·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남, 전북·남, 경북·남, 제주

○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연쇄가격 기준)] 1.9% 성장, 전년(3.3%)대비 성장세 둔화

- (산업별) 건설업과 광업 등은 부진하였으나 제조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등은 증가

- (사·도별)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제주, 울산, 충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 제주, 울산, 충남 등은 농림어업, 제조업, 운수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전북과 광주 등은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의 부진으로 감소하거나 낮은 성장세

※ 상위지역: 제주(5.3%), 울산(3.6), 충남(3.4)

※ 하위지역: 전북(-0.6%), 광주(0.7), 경북(1.1)

○ [개인소득(실질)] 0.9% 증가

- (사·도별) 인천, 충남, 제주 등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전북, 울산, 대구 등은 소폭 감소

※ 상위지역: 인천(4.1%), 충남(3.8), 제주(2.7)

※ 하위지역: 전북(-1.6%), 울산(-0.7), 대구(-0.4)

4) 1인당 주요 지표

○ [2012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울산 지역이 가장 컸고, 충남, 전남, 경북, 서울, 경남은 전국 평균(2,550만 원) 상회

※ 상위지역: 울산 6,330만 원(248.2), 충남 4,179(163.9), 전남 3,653(143.3)

※ 하위지역: 대구 1,566만 원(61.4), 광주 1,769(69.4), 부산 1,845(72.4)

○ [1인당 개인소득] 울산, 서울, 부산, 대전이 전국 평균(1,447만 원) 상회

※ 상위지역: 울산 1,831만 원(124.0), 서울 1,752(118.6), 부산 1,505(101.9)

※ 하위지역: 전남 1,249만 원(84.6), 강원 1,288(87.2), 전북 1,315(89.0)

○ [1인당 민간소비지출] 서울, 울산, 경기도가 전국 평균(1,367만 원) 상회

※ 상위지역: 서울 1,751만 원(128.1), 울산 1,413(103.4), 경기 1,381(101.0)

※ 하위지역: 전남 1,085만 원(79.4), 충북 1,103(80.7), 전북 1,111(81.3)

* () 안은 전국 대비 상대수준

〈사·도별 경제성장률 및 성장/부진 업종〉

구분	지역	성장률	성장 업종	부진 업종
7대 도시	서울	1.9	금융보험업(9.0%), 정보통신업(4.9%)	건설업(-8.6%), 운수업(-3.6%)
	부산	1.7	운수업(5.4%), 보건·사회복지업(7.4%)	전기·가스·수도업(-6.0%), 농림어업(-11.0%)
	대구	2.4	공공행정·사회보장(5.1%), 금융보험업(5.0%)	건설업(-3.8%), 교육서비스업(-0.5%)
	인천	1.4	운수업(7.1%), 제조업(1.5%)	건설업(-16.4%), 금융보험업(-4.3%)
	광주	0.7	보건·사회복지업(9.9%), 건설업(9.1%)	제조업(-7.2%), 농림어업(-6.0%)
	대전	2.5	제조업(8.6%), 공공행정·사회보장(6.2%)	건설업(-14.4%), 금융보험업(-5.4%)
9개 도시	울산	3.6	제조업(2.6%), 운수업(15.1%)	도소매업(-1.9%), 광업(-4.3%)
	경기	1.5	제조업(2.1%), 전기·가스·수도업(16.4%)	건설업(-10.1%), 금융보험업(-1.5%)
	강원	1.6	공공행정·사회보장(4.8%), 제조업(2.4%)	운수업(-13.8%), 전기·가스·수도업(-9.7%)
	충북	1.7	제조업(1.3%), 사업서비스업(17.2%)	건설업(-6.9%), 운수업(-5.9%)
	충남	3.4	제조업(1.2%), 농림어업(10.9%)	전기·가스·수도업(-12.1%), 사업서비스업(-0.8%)
	전북	-0.6	공공행정·사회보장(4.9%), 금융보험업(7.6%)	제조업(-4.1%), 농림어업(-2.1%)
	전남	2.4	제조업(5.5%), 공공행정·사회보장(4.7%)	건설업(-4.2%), 금융보험업(-2.6%)
	경북	1.1	농림어업(11.3%), 사업서비스업(19.4%)	건설업(-5.0%), 전기·가스·수도업(-5.6%)
	경남	1.2	사업서비스업(24.7%), 공공행정·사회보장(5.3%)	전기·가스·수도업(-12.7%), 건설업(-1.9%)
	제주	5.3	농림어업(9.6%), 사업서비스업(32.4%)	전기·가스·수도업(-3.9%), 금융보험업(-1.9%)

주: () 안은 해당업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